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주한미군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7
1. 전통적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7
2. 9·11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10
3.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결정과 대한반도정책	13
III.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 원인과 배경	23
1. 미국의 세계전략(GPR) 변화	23
2. 국내적 요인	27
IV.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내용과 추진상황	33
1.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내용	33
2.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주한미군 체제개편	40
3. 용산기지 이전	45
V.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49
1.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안보	49
2. 주한미군의 전략적·군사적 의의	60
3.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62

VI.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방향	67
1. 한·미 동맹 재정립 방향	67
2. 안보정책 대응방안	72
VII. 결론	83
참고문헌	87
최근발간자료	91

서론

I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성립된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자유체제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안보 우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후 한반도에 주둔해 온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입각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실천적 조치로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상징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¹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유체제를 수호하고, 경제건설과 사회안정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함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양대 축(軸)으로서, 북한을 전선(前線)으로 하는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하며, 중국 등 지역패권의 흥기(興起)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주의 체제가 범세계적으로 붕괴된 오늘날에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 주변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근본 목적과 역할에 그 변

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7일 가조인 되어, 10월 1일 정식 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통해 표현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전반적으로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②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확산하며, ③가능하면 자유체제에 기초한 한민족(韓民族)의 통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정책의 기초 하에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위기와 대남 적화전략, 그리고 핵개발을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인식,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마련에 골몰해왔다.

최근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재래식 군사동향,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초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도덕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국가이념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공화·민주 양당에 공통된 점이며, 양당간 전략·전술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본 골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²

그러나, 수십 년간 지속된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초가 최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정책변화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5월 17일 발표된 미국의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 결정과 6월 8일 발표된 1만 2,500명(既언급된 3,600명 포함)의 감축계획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³

² 북한 핵문제에 대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정책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응방식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당 후보 공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강경책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이러한 대한반도정책 변화 배경에는 9·11테러 이후 세계전략 재정립과 아프간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안보전략과 군사기술적 고려에서 시작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작업을 들 수 있으나, 동시에, 최근 한국 내에서 확산되어 온 반미감정과 대북 핵정책 공조 이상(異狀)으로 한·미 관계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간과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한반도정세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매우 빠른 시일 안에 계획되고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여부 문제 등이 주한미군 철수 이후 비무장지대 안보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주국방 능력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한국의 국가안보상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미군은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미국방장관의 거듭된 언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동맹국인 한국과 대북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유지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북한 핵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평화적 해결’을 고집하는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북핵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점에서, 美행정부는 북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대북 핵억지 공동전선에서 한·미 양국

³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 인터뷰 내용 참조(2004. 5. 17). 처음 2005년 말까지 감축 키로 되었던 1만2,500명의 비무장지대 주둔 2사단 병력은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미간 최종 합의되었다(2004. 10. 14).

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을 꼽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 점이 주한미군 감축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은 북핵문제를 미·북간의 문제로 보고, 북핵 저지보다는 ‘평화적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며, 미·북간의 ‘중재’ 역할을 자임(自任)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완화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도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⁴ 예컨대, CVID에 대하여도, 한국은 좀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미국이 대북핵 정책방향에서 좀더 유연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실시 된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가안보상 담당해 온 중요한 역할은 한·미간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정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은 1만 2,500명의 감축 계획이 발표된 직후, 이를 가능한 연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연장로켓과 아파치헬기의 잔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을 정도이다. 주한미군이 담당했던 비무장지대의 안보공백을 메우는 일이 현재 우리 軍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안보에의 손실을 인지(認知)하면서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근본 배경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

⁴ 2004년 10월 11일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대통령은 “북핵문제는 구조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함.

⁵ CVID: 미국의 대북 핵원칙으로 제시된 ‘안전하고, 증명이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核해체(Complete, Verifiable, Irrevocable Dismantlement)’를 의미함.

화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 및 국방 분야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상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들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서는 첫째,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정책과 한·미동맹체제 및 한·미·일 연합안보체제에 대한 한국의 향후전략을 위한 기본인식과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재래식 군사력,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여부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이후 한국의 안보대응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II장에서는 주한미군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볼 것이다. 전통적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를 간략히 살펴 본 후, 9·11 이후 급변하게 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및 그에 따른 한반도정책상의 변화와 지속의 요소들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불러 온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전격 결정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GPR이 일반적으로 그 배경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반미감정의 확산과 대북정책상의 한·미 양국간 불일치가 또한 간과(看過)하기 어려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2004년 5~6월 전격적으로 미국에 의해 통보된 미2사단 2여단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이를 포함하여 1만 2,500여 명에 이르는 대북 핵심방어전력 추가감축 통보 이후, 한·미 양국간 전개된

미군감축 협상과정과 마침내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최종합의한 내용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용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에 관한 타결 내용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제V장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이후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능력에 대하여도 견해와 평가가 분분하다.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고, 아울러,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전략적·군사적 의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고찰하게 될 것이다.

제VI장에서는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미동맹 재정립 방향과 몇 가지 구체적인 안보적 대응방안을 열거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1. 전통적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미국의 대외정책은 원칙적으로 도덕성(morality)에 근거하면서, 현실권력(reality, power)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美대외정책의 커다란 명제가 되어왔다. 도덕적인 목표로서는 자유세계의 보호와 유지,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의 신장 등이 제시된다. 미국이 북한 내 인권상황과 탈북민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⁶

동시에 미국은 세계정치의 현실권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군사력에 기초한 힘의 바탕 위에 외교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미국은 대외관계에서 세계체제의 안정 및 평화유지를

⁶ 2004년 9월 美하원은 상원이 수정·통과시킨 『2004 북한인권법안(2004 Human Rights Act of North Korea)』을 재의결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立法조치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부시대통령이 10월 18일 서명함으로써, 同법안은 미국의 정식 법률로 발효되었다.

위한 지도자 역할과 패권국가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균형자의 역할, 세계질서를 위한 공공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에 패권국가의 출현을 불용(不容)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운영 속에 아·태(亞·太)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접근과 이익을 확보하며, 핵(核)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미·일, 한·미 동맹체제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면서, 미·일 동맹을 대동북아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⁷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의 커다란 범위 내에서 대한반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된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안보·군사 동맹관계에 돌입하였다. 미국의 한국참전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불개입 정책에서 전격적인 개입정책으로 선회하게 하였고, 전쟁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자유체제를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킨다는 외교정책의 기초를 토대로, 미지상군의 한국 주둔을 매개로 하는 한·미 동맹을 적극 지지해왔다.⁸ 따라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⁷ 미국은 현재 일본에 47,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⁸ “한반도의 안정은 한·미 양국의 확고한 동맹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하여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확고함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이를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시대통령의 도라산 연설 (2002. 2. 20) 참조.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은 강력한 한·미 동맹체제의 유지와 주한미군이라는 전진배치 전력을 근간으로 ‘한·미 연합억제전략’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⁹ 그리하여 이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장차 있게 될 한반도통일을 지원하는 것이다. 1998년에 미국의 국방대학원에서 발간된 『전략평가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서에서 미국은 경제적 번영 보장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보호라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세계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바,¹⁰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첫째 그룹인 중요한 핵심국가(Core Partner)로 분류하고 있다.¹¹ 이는 미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이를 유지·확대시키는데 함께 나아갈 중요한 동맹국가로 한국을 인식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본 취지와 주한미군의 임무는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 내외에 양국관계의 이러한 기본적 유대의 근거를 동요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최근 증대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⁹ 대한민국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2. 4).

¹⁰ 첫째 그룹은 미국과의 이해를 같이하는 핵심국가들(Core Partners)이고, 둘째 그룹은 핵심그룹으로의 진입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Transition States)이며, 셋째 그룹은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이념 또는 수단을 가진 국가 단체들(Rogue States/Nonstates)들이고, 넷째 그룹은 내전 및 전쟁 등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요구되는 국가들(Failing States)이다.

¹¹ 2001년도에 발간된 『FY2002 미국방 연례보고서』 참조.

2. 9·11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9·11테러사건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9·11 이후 미국 안보전략의 이동(移動) 방향은 전반적으로, 테러국가에 대한 반테러전쟁을 수행하는 문제와 반테러전쟁에서의 전략 변화 곧 기존의 단순한 ‘전쟁억지(deterrence)’를 넘어서서, ‘선제공격(striking first)’ 가능성을 천명한 것으로 집약된다.¹²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들(북한과 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중국·러시아 등 7개국)에 대해 긴급상황 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¹³ 미국이 종래 ‘위협용 억지력으로서의 핵군사력 사용’이라는 핵억지 전략으로부터 비상사태 발생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핵사용이 가능한 특정 전장(戰場)상황에 북한의 ‘남한 침공’ 경우가 포함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과의 싸움을 통해서, 테러가 공개적 표적(標的)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자, 미국의 안보전략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강조하게 되었다. ‘불량국가’와 ‘대량살상무기’와의 연계 곧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가 위험한 ‘불량국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의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

¹² 이에 관하여는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미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국정자문 연설 참조. 부시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처음으로 ‘악의 축’으로 7개국을 거론함. 또 하나의 참고자료로서는 2002년 6월 1일 부시대통령이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발표한 ‘선제공격’전략 참조.

¹³ 2002년 1월 8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제목의 비밀보고서의 내용 참조. *Los Angeles Times*는 9일, *New York Times*와 *Washington Post* 등 주요 신문들은 1월 10일 이를 일제히 보도함.

다. 미군의 해외군사기지와 배치의 전면 재조정 시도는 바로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테러와 불량국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응징, 통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미국의 새로운 세계안보전략상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것이다.¹⁴

미국의 이러한 세계안보전략상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2001년 1월 출범 직후부터 북한체제에 대한 강한 도덕적 불신과 함께, 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9·11테러 이후 아프간 반테러 전쟁을 치루고 난 이후인 2002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연두(年頭)교서에 나타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여전히 테러를 지원하는 이른바 ‘부랑배 국가(rogue states)’로서,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an axis of evil)」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지도부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함으로써, 김정일정권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①휴전선배치 재래식무기 철수, ②평화외지 선언, ③대량파괴무기 수출 중단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이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곧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감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¹⁴ 오진룡, “9·11 이후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개괄,”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3. 12. 19).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도 특히 주목하였으며, 미사일 수출을 북한과 테러리스트들의 연결고리로 파악하여, 이를 해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기본개념은 이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그 기초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편, 상당한 부분 대북인식을 놓고 한국과 이견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대중정부 ‘햇볕정책’ 하에서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현금지원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계되지 않은 대북경협 및 지원은 한·미관계 및 한반도정책에 대한 미국의 동요하는 시각과 정책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¹⁵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임무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일내에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부시행정부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한반도정책상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미국 나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곧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정책방향을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2002년 2월초 있었던 부시대통령의 방한(訪韓)(2002.2.19~2.21)과 한·미 정상회담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¹⁶

¹⁵ 美의회조사국(CRS)이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는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혼란된 시각(視角)을 잘 드러내고 있다. 미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선임연구원 래리 닉쉬(Larry Nicksch) 작성, 2002년 3월 25일 발간. 미국은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 지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협상, 대북 전력(電力)지원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¹⁶ 앞서 인용한 부시대통령의 ‘도라산 연설’ 참조.

예컨대, 미국은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했으며,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다.¹⁷

아마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2002년 10월 켈리 미국 특사의 북한 방문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 프로그램을 우려하던 미국은 이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기하였고, 이후 북한문제는 한·미 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제네바핵합의』에 입각한 북한 핵 동결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同 합의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 곧 경수로사업의 지속 또는 폐기를 놓고 한·미 양국은 첨예한 이견을 노정시켰으며, 무엇보다도 동년 12월에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일어난 대규모 반미 시위는 미국의 대한국 인식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이전인 동년 6월경에 발생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은 두고두고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멘텀이 되었다.

3.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결정과 대한반도정책

가. 주한미군의 감축 결정

2004년 들어서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예정보다 빨리 추진시키

¹⁷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주한美대사,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한 국동문화 초청 강연 (2002. 3. 21) 참조.

고 계획해 왔다. 당초 2006년으로 예정된 미지상군 감축시기를 그 규모도 1만 2,500 병력으로 증대시켜 1년 앞당긴 2005년 말까지 완료할 것임을 한국정부에 통보한 바 있었고 (이 중 3,600여 병력은 이미 전격적으로 이라크로 철수하면서 減軍 조치), 우여곡절 협상 끝에 현재는 3년 연장하여 2008년까지 단계적 감축에 합의한 상태이다.¹⁸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의 조약이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의한, ‘전투사단에 바탕을 둔 조직’ 중심에서 ‘보다 소규모의 이동성이 높은 여단 중심’의 부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⁹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재개편이 9.11테러사건 이후 대폭적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곧 軍의 신속성과 기동화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문제는 과연 예정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군감축과 재배치 작업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에 있어 대외적이고 표면적인 명분(rhetoric)과 실제 의도와는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곧, 미군감축 표면상의 대외적 명분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²⁰

¹⁸ 2004년 6월 7일 한미동맹 정책협의회 결과, 당초 2006년으로 예정된 미지상군 감축시기를 1년 앞당겨서 200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통보해 옴. 이후 2004년 10월 14일, 감축시기를 200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

¹⁹ GPR은 2002년 9월과 이어 2003년 11월에 공식 발표되었다.

²⁰ 애덤 어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2004. 6. 7)에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의 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의 조약이나 안보공약의 감소를 시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릴리 대변인은 “우리는 세계적인 해외주둔 병력 재배치 작업을 하는 중”이라면서 “그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전세계 우방 및 동맹국들과 좋은 협의 및 논의를 해왔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화약고’ 중의 하나로, 한반도에서 자유체제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미국의 중요한 동북아 정책과제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해 온 부시행정부 조차도 ‘대한국 공약의 확고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처럼 신속하고 큰 규모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를 구상해왔다는 사실상의 증거를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본질은 ‘억지(deterrence)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에 첨단무기로 무장한 지상군을 배치,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라크전쟁의 와중에도 미국은 북한의 오판(誤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주둔 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았다.²¹

이런 점에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개여단 지상군 병력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고 한국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전쟁억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 군사력이다. 이런 이유에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에 앞서는 동북아시아의 최우선 군사력으로 간주되어,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은 항상 中東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왔고, 이는 미국 및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이해해 온 사안이다.²²

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1세기의 위협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²¹ 이춘근, “주한미군 4,000명 이라크 차출과 한국의 안보상황,” 『조선일보』, ‘유용원의 군사세계,’ 2004년 5월 19일 < <http://brd3.chosun.com/bemil/view.html> >.

²² 이춘근, 위의 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군사력은 49만 명으로 양적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테러전쟁과 이라크전쟁을 거치는 기간 동안, 미국은 집중하는 전투병력 수요(需要)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온존(溫存)시킨 채,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해 왔다.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美육군 2사단은 오키나와의 제2해병 원정단과 함께, 미군 중에서 전투능력상 최고로 평가받는 부대들이라고

이러한 성격의 주한미군을 차출하여 이라크에 파견키로 한 미국의 결정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및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징표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4년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지상군 감축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異例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그것이 미칠 엄청난 파장의 측면에서 美언론의 표현대로 실로 ‘역사적’인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다.²³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 및 전략이 변화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으로 대응해 나아가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동맹의 적절한 활용을 전제로, 안정적 안보상황 유지와 자주적 국방능력 발전은 양립 가능한 목표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결정 과정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위상과 운용 방침의 재정립을 위한 미국측의 탐색과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주한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역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군사력이 아닌, 지역 차원의 평화유지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고, 그만큼 국내외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²⁴ 한국정부는 이러한 주한미사령부의 입장 표명이 향후 한·중(韓·中)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한다.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투입하지 않은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를 이완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²³ CNN, May 17, 2004. 또한 필자의 拙稿, “주한미군 감축과 안보불안: 분석과 대책,”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2004. 8. 2) 참조.

²⁴ 2004년 5월 27일 캠벨 사령관의 발언. 미국측은 이미 2004년 4월 25일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중장)의 ‘21세기 한·미 연합군의 동북아 평화유지 활동 수행 가능’, ‘주한미군의 전 세계 투입 가능’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활동을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캠벨 사령관의 발언이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군측에 항의한 바 있다.

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²⁵

한편, 한·미 관계의 새로운 위상정립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다. 예컨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수행에 있어서 미국과 ‘핵심적 양자관계(Key Bilateral Relationship)’의 대상국가에 한국이 여전히 포함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²⁶ 일본에 대해서는 ‘태평양에서의 핵심동맹’이라는 강조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외교정책 담당자들간에 많은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⁷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인지 주목되어왔다.

나. 북한 핵·인권 현안과 미국의 대북정책²⁸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결정을 전후하여 고찰해 볼 때, 미국의 한반도전략은 상술(上述)한 대한반도정책 기초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관계 동요와 같은 한반도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다. 먼저 북한 핵문제나 인권문제 현안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인권 두 현안이

²⁵ 중국은 주한미사령부의 이러한 입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주한중국대사관의 관계자: “캠벨 사령관의 발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가 우리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라 언급함. 정부는 북핵위기 해결 과정에서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역할을 중시, 캠벨 사령관의 발언이 북핵문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함. 『조선일보』, 2004년 5월 27일.

²⁶ 미첼 라이스 미국무부 정책실장, “변화하는 아시아에서의 도전과 기회,” 미국 아시아재단에서 행한 연설 (2004. 5. 14.) 참조.

²⁷ 상기 연설에서 라이스 실장은 핵심적 양자관계를 ‘일본·중국·인도·파키스탄’ 등 4개국으로 한정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따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음. 라이스 실장의 연설 내용은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하는 시점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²⁸ 한국정치학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拙稿, “국가안보 측면에서 본 수도이전 정책 평가” (2004. 10. 15) 참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핵을 용인(容認)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의 인권참상(慘狀)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⁹ 따라서 대화와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인권의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인 대안과 김정일정권 교체방안까지 포함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심각하게 고려해 오고 있다.

종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대북 억지(deterrence)로서 북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가 점차 가시화되고,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 협상이 실효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전략을 크게 수정·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곧 최선의 협상 노력을 전개하되, 일정한 한계선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명분에 집착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음에 따라, 미국은 독자적인 북핵 해결 방도에 이미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불특정적’이고 ‘은밀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었고,³⁰ 美민주당 케리 후보는 북한과의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북 군사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³¹

이후 부시행정부측에서 일관된 대북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은 美조야(朝野)에서 정파를 초월한 일치된 목소리의 반영이다. 예컨대 북한

²⁹ 크리스토퍼 힐(Hill)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관용(tolerance)을 베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 내용 (2004. 10. 5) 참조.

³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2004년 8월 8일 언급.

³¹ 美대선 1차 토론시의 발언: 이는 북핵 협상 노력이 실패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의 벼랑끝 핵공세가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제거 필요성을 더 강하게 해 줄 뿐”이라면서, 북한이 계속 핵개발하고,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할 경우, UN안보리 회부와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³² 물론 美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신 이후 6자회담의 조기 재개최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해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³³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 의지를 고려하여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북한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선제공격론 뿐만 아니라, 북한 무장해제론도 진지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 또는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 목표 수준으로까지 상정하는 이유는 북한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자유와 인권을 모토로 하는 미국 외교정책 원칙상 북한인권 참상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공화·민주 양당 당파를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³⁴

³² 美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북한의 주장들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제거 필요성을 더 강하게 해 줄 뿐”이라고 강조(2004년 9월 28일). 美국무부 존 볼튼 군축·안보담당 차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美국무부 부 장관은 북한이 계속 핵개발하고,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할 경우, UN안보리 회부와 제재 가능성을 경고함(2004년 9월 29일).

³³ 파월 美국무장관이 訪韓하여(2004. 10. 25~26), 이러한 방침을 재천명함. 한편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함.

³⁴ 2004년 9월 23일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美민주당 의원 3명이 잇따라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국 군사행동의 불가피성을 가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함. 이들은 주로 북한의 도발이나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가정한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 질의의 초점을 맞춤. 이는 공화당의 ‘선제공격론’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서 미 의회 내의 대북 불신과 강경 분위기가 당파를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미국 외교정책 수립 담당자들은 대선 이후 다시 한번 6자회담을 통해 ‘협상에 의한 북핵 해결’을 시도하되, 이것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상기 대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마무리짓고, 그 실현 가능성 탐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는 이른 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분석들이 자주 제시되고 있다.³⁵ 그 주요 내용들은 북한핵문제를 두고 전개되고 있는 미·북 양측간의 상호불신과 그에 따른 오판(誤判)과 오산(誤算) 가능성, 상대방에 대한 악(惡)의 이미지로 인한 극단적인 결정 가능성에 기초한다. 이와 아울러, 현재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다자회담인 6자회담이 마침내 결렬될 경우, 양측간 무력충돌을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³⁶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미국 법률로 발효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향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장(章)을 열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⁷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최대

³⁵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최근 펴낸 “2004-05년 동북아시아” 연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위기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선제 공격하거나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공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同보고서는 향후 한반도 시나리오를 ①불안한 균형 지속, ②대화를 통한 북핵 협상 타결, ③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 ④북한의 핵 보유, ⑤북한 내부 붕괴, ⑥군사적 충돌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전면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함. NBR은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상의 없이 북한에 대한 독자 공격에 나설 수 있으며 북한도 한국이나 일본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예측함.

³⁶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소의 장롄구이(張璉奎<王鬼>) 교수가 시사주간지 『신문주간(新聞週刊)』 최신호에 기고한 글 참조(2004. 10. 6). 6자회담 파국 시 미·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관측함. 결국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단호한 대북정책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함.

³⁷ 2004년 10월 4일 美하원은 『2004 북한인권법안(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함. 이어 10월 18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함.

2,400만 달러를 2005년부터 4년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대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통해, 美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영향을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입 및 영향력 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인권’ 개념에 토대를 둔 국제사회의 핵심 관심사항으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정간섭’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안(事案)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³⁸ 현대의 국제체제에서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국가의 주권(主權)행동도 용인될 수 없고, 인권침해 사항은 더 이상 한 나라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세계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국가의 주권행동에 대해, 개입과 제재를 가할 도덕적, 법적 권리와 명분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⁹

북한이 ‘내정간섭’이라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계속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수록, 국제사회의 간섭과 제재는 증대될 것이다. 미국의 금번 북한인권에 관한 입법(立法)조치는 향후 UN이나 EU 등 다른 서방국가들의 본격적인 북한인권 문제에서의 개입을 유도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³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2004년 8월 8일 참조.

³⁹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과 국제사회의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 원인과 배경

1. 미국의 세계전략(GPR) 변화

전장(前章)에서 간략히 고찰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는 것이 9·11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이다. 그러나 GPR이 공식 발표된 것이 2003년 11월이고 미국측에 의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2003년 2월경부터임을 감안하면, 사실 GPR을 주한미군 감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GPR이 주한미군 감축의 근거를 제공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GPR은 2002년 9월 부시행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 전략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테러 및 WMD위협 제거, ②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불사, 그리고 ③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 강화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안

보전전략의 바탕 위에, 부시행정부는 反테러 전쟁의 효율화를 위해, 미군 병력구조의 개편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⁴⁰

이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방위태세 검토(GPR) 계획은 테러 발생 및 WMD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나 지역 근거리에서 해외미군 기지들이 위치하여 작전할 수 있도록 거점주둔군을 감축하고, 전력배치를 다변화하여, 신속성과 기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필요시 적재적소에 첨단 군사력과 기동력을 갖춘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곧 기존의 ‘재래식 작전(CO: conventional operation)’의 전쟁 개념으로부터 ‘신속결전(RDO: rapid decisive operation)’ 개념으로의 변화를 통해, 해·공군력 강화, 지상군 정예화, 첨단전자장비와 공지(空地) 전투력의 융합, 합동작전능력 강화, 속도전과 기동력 강화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변화의 대강(大綱)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1만2,500명 철수와 함께, 주독미군 2개 사단 3만 여명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신, 호주, 베트남, 터키 등으로 주요 전력 배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의 전세계적 미군 재배치 작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주일미군에 대하여는 “주일미군에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력 이동이 주가 아니라 현 상태의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이 많다.⁴¹ 주일미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독일에서 철수될 미군은 현재 이라크에 투입돼 있는 제1기갑사단과 제1보병사단으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미국 본토

⁴⁰ 김성한,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GPR)과 한·미동맹,”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2003. 10. 17) 참조.

⁴¹ 워싱턴발 AP 통신과 싱가포르발 AFP 통신 보도. 또한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아시아태평양 담당 편집자인 밥 카르니올 언급.

로 돌아가게 된다.⁴² 미국은 호주와 필리핀에서의 군사훈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베트남 항구 이용을 추진하는 한편, 반(反)테러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축적 협력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⁴³

미국은 이러한 전반적인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향후 한반도 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 기본원칙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미군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⁴⁴

이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으로 상징되는 21세기 국제안보환경에서 주한미군을 종전처럼 마냥 한반도에 묶어둘 수 없는 만큼 몸집을 줄여 동북아 지역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곧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골자는 미군의 기동성을 높여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과 테러 등 국제적인 분쟁이 우려되는 곳으로 분산·재배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군을 ‘불박이식 국방 개념(static defense)’에서 더 신속하고 더 유능하면서도 21세기 지형에 맞는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2004년 6월 이후 4개월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등 12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규모 및 시기, 소요시간, 안보불안 해소방안, 한·미 新안보개념 도입

⁴² 더글러스 페이스 美국방부 차관의 AP 통신과의 인터뷰(2004. 6. 8) 내용 참조: 독일 국방부 및 외교부 간부들에게 2개 사단 감축계획을 전달했음을 확인하고, 미국이 최첨단 전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 독일에는 좀더 적은 병력의 경무장 기동부대가 배치될 것이라면서 이는 퇴각이 아니라 병력 일부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독일주둔 미군 2개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거의 결론을 내린 상태임을 확인함.

⁴³ AFP 통신이 전한 군사전문가들의 전언.

⁴⁴ 아시아지역 국방장관들과의 회담을 위하여 싱가포르를 방문 중,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행한 연설 참조. 『AP연합』, 2004년 6월 4일.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해왔다. 1만 2,500명의 감축계획을 당초 2005년 말에서 2008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용산기지 이전에 최종 합의하였다. 2004년 6~7월경 미국은 전세계적인 美육군 구조개편 계획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한·미 간에 최종합의된 내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⁴⁵

미국은 이번 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억제력이나 방어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병력을 감축하더라도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들여 3개년 전력 증강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보수집능력 향상과 정밀탄약 증대, 최신예 전투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 투입, 정밀유도식 통합직격탄(JDAM) 도입 등이 포함된다.⁴⁶

주한미군의 3분의 1이 단계적으로 한국을 떠나게 될 이번 감축 계획을 둘러싸고, ‘안보 공백이나 실질적인 전력 강화냐’ 하는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비교적 단호한 한국방위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1만 2,500명의 미군이 완전 철수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새로운 전투여단 증강에 투입돼 한국 방어임무를 맡게 될 것이며, 한국은 24~48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전투 증원병력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안’의 수사(修辭)를 거듭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계가 고조되면 본토의 미군이 증원·투입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도록 단념시키고(dissuade), 단념이 실패할 경우에는 억지

⁴⁵ 미군감축 협상의 미국측 대표였던 리처드 롤리스(Lawless)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2004년 10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⁴⁶ 『연합뉴스』, 2004년 6월 4일.

(deter)에 나서고, 역지에 실패하면 싸워서 패배시킬(defeat)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언하고 있다.⁴⁷

2. 국내적 요인

가. 反美감정의 증대

2004년 6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핵심 방어전력 미2사단 병력 3,600명의 전격적인 이라크 차출 및 사실상의 철수에 이어, 이를 포함하는 1만 2,500명의 감축이 발표된 이후 한국사회는 격렬한 논쟁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선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GPR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감축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를 늘린 것은 한국의 반미주의 증폭과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간 정책공조 이상(異狀)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미국측의 감축요청이 김대중정부 말기부터 있었던 것임을 강조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의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 감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라크전쟁에서의 병력 필요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내 점증하는 반미감정의 확산에 그 원인이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감축은 기본적으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⁴⁸

⁴⁷ 리처드 롤리스, 상기 인터뷰 내용 참조.

⁴⁸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문정인(文正仁)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전경련 국제경영원(IMI) 초청 월례조찬회(2004. 8. 27)에서 “작년 12월 30일 미국 NBC뉴

“미군은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거듭된 美 국방장관의 언급이 의미하는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인명피해를 감수하고 지상군을 주둔시키며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감사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때, 주한미군 주둔 의의에 대한 회의(懷疑)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군대를 위협하는 상대에 대해 ‘주적(主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 동맹의 의미는 사실상 감퇴(減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명피해를 감수하는 자국군대의 주둔이 무의미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미 양국관계를 분석하는 많은 보고서들도 한국국민의 반미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결국 양국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다음 절에서 분석하겠지만, 한국의 반미감정은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와 불가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미 관계의 중심은 ‘북한’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한·미 양국관계에 대한 가장 큰 민감성과 타격은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귀결되며, 이는 곧 최근 담론(談論)의 중요한 주제라 할 ‘자주·민족’과 ‘동맹’ 간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사실 양국간 확대되고 있는 대북정책과 시각의 차이는 동맹의 핵심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 분노를 조장·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스가 용산기지에서 미군 헌병이 한국 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장면을 3~5초 가량 방영했으며, 이 장면을 지켜본 럼즈펠드 美 국방장관이 격분해 ‘God damn it!(제기랄), Get them out!(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 와라)’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 앞당겨진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일보』, 2004년 8월 27일.

⁴⁹ 데릭 미첼, 『전략과 정서: 미국 및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견해(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4. 6. 8) 참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국민들은 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강경정책 때문으로 귀착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안보위협 측면에서 북한을 덜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것도 기실 반미감정이 그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핵문제가 미·북간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북핵 위기의 원인이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인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최악의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나 화해에 장애물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의 증대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만 해도, 한국의 대외관계상의 전략적 계산에 있어 중국이 부각됨으로써, 미국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자주적인’ 방위태세 촉구 내지 그러한 방향으로의 잦은 언급도—물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한국으로 하여금 자주국방 능력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⁵⁰

이렇게 볼 때, 2004년에 미국이 주한미군의 3분의 1, 그리고 독일로부터 2개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한 결정은 한국과 독일이 지난 수년간 ‘반미운동의 본산’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이런 점에서 이번 주한미

⁵⁰ 위의 글.

⁵¹ Richard Halloran, “South Korea not a reliable ally?,” *The Korea Herald*, June 11, 2004, p. 6.

군 감축 결정이 한국의 반미운동 확산에 대한 ‘견제용’이라거나, 한국 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분석가들도 있다.⁵²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촉발된 반미감정이 향후 한·미동맹의 근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한·미 양국 중 어느 일방(一方)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정서 표출은 타방(他方)으로부터 그에 대항하는 불만과 분노를 유발하면서,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넘어서 상호 감정을 악화시키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정서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특히 계층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급진적 젊은층’과 달리, 사업가들, 고위 관료, 학자 등 전통적인 중산·보수층은 자유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정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한·미간 대북공조 이상

한편 한·미 양국간 대북 인식의 차이가 주한미군 감축을 유발하는 최대 원인이라는 분석이 최근 여러 곳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초에 가장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차이’이며 이것이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발표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분석과 판단의 기저에는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대

⁵² 일본 『요미우리 신문』, 2004년 6월 9일; Richard Baker, a researcher at the East-West Center in Hawaii, asserted on June 9 that the planned reduction in Korea “basically calls the bluff of those in Korea who have been calling for the United States to go away.” Cited from the above Richard Halloran’s paper.

⁵³ 데릭 미첼, 『전략과 정서: 미국 및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견해(Strategy and

한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미국측의 불만도 이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 내 일반 대중의 분위기 속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사실 “반(反) 공산주의가 더 이상 양국을 결합시키는 원칙이 아닐 때, 동맹 및 미군 주둔의 근본 이유와 공동의 위협 인식에 관한 기존의 가정은 문제가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⁵⁴ 바로 이 점이 2004년 5월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파견·철수케 한 뒤, 한국 주둔 미지상군을 영구 감축하기로 한 부시행정부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페리 前미국방장관은 ‘한국정부가 북핵위기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⁵⁵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야말로 동맹 관계 유지에 결정적 요인임에도, 현재 “미국정부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함께 있지 않다(are not together)”고 언급하고, 인식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의 정책을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⁶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과연 실제적(real)인가의 여부, 그리고 설사 실제적임을 인식하더라도, 김정일정권이 남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별 여부가 한·미동맹 유지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이다.⁵⁷

당면한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한·미 양국이 북핵 위기가 얼마나 위협적이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참조.

⁵⁴ 위의 글.

⁵⁵ 김창기(金昌基) 편집 부국장과의 인터뷰 요지. 『조선일보』, 2004년 6월 4일.

⁵⁶ 청주대 국제협력원 주최 국제학술회의(2004. 6. 3)에서 행한 ‘기조연설’ 내용 참조.

⁵⁷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그 위협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전범”으로 처리될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국정감사 답변 내용(2004. 10. 18.) 참조.

일치를 이루는 것이 긴요한 사항이다. 일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은 결코 그들의 형제인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험한 현실인식이자, 또한 미국측의 불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통적 한·미 안보동맹이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변질’로 넘어갈 가능성이리라 하겠다. 한·미 양국이 동맹국으로서의 ‘공동의 적’과 ‘공동의 목표’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 군대를 원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곳에 주둔시킬 것이라는 린스펠드 미국방장관의 언급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2차 대전 직전 독일의 주변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테러국가들과 개별적 평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볼 때, 한국의 ‘반미정서’와 이른바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대북 유화정책을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당선될 경우 ‘북한과 단독협상을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심지어 북한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인하는 방안으로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은 물론,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함께 남북한의 통일문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그 진의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⁵⁸

⁵⁸ 상기 대선(大選) 1차 토론 내용 참조.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내용과 추진상황

1.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내용

가. 감축협상 경과

한국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1만 2,500여 명의 감축계획을 통보해 온 이후,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강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병력 및 장비의 감축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수차례 걸쳐 미국측에 이러한 우려입장을 공식 전달하였다. 특히 정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자체 분석에 입각, 주한미군 병력이 다연장로켓(MLRS) 등 핵심 장비와 함께 200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측에 감축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⁵⁹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11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3개년 전력

⁵⁹ 『조선일보』, 2004년 8월 17일.

증강계획의 시행 시기를 명확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군의 감축시기를 주한미군 전력증강 완료 시기와 일치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⁶⁰ 정부는 특히 이러한 입장을 2004년 8월 19~20일 개최된 「제11차 미러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3개년 전력 증강 계획이 미군 감축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통보 이후 안보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오던 정부는 ①대북억제 핵심 전력 감축의 최소화, ② 既합의된 주한미군 담당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일정, ③11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④미2사단 1,2단계 재배치계획, ⑤ 협력적 자주국방계획 등의 5가지 협상 원칙에 의거, 주한미군 감축협상에 임한 것으로 분석된다.⁶¹

특히 정부는 미2사단 병력이 담당하고 있던 핵심 방어전력 곧 다연장로켓(MLRS) 부대, 아파치헬기 부대, JSA(공동경비구역)지원 전력, 정보부대 등 핵심전력의 철수에 관한 한, 한국 자체적인 안보공백 보완 시기와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한국정부의 요청과 특히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시행조치, 그리고 미국 내 반대 여론에 힘입어, 미국은 마침내 핵심 전력(戰力) 철수 연기를 포함하는 감축일정 연기에 합의하게 된다.

나. 미군감축을 둘러싼 미국 조야(朝野)의 반응과 미국의 정책

한편 美대선과 이라크전쟁 외증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⁶⁰ 『연합뉴스』, 2004년 8월 20일.

⁶¹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 국회방문 보고 내용(2004. 8. 4).

문제를 두고, 미국 조야에서 다양한 논란과 반응이 표출되었다. 존 케리(Kerry) 민주당후보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실재(實在)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남북한에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위협이 실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주한미군 1만 2,500여 명을 철수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임을 지적하였다.⁶² 케리 후보는 또 아시아와 유럽 주둔 미군 철수는 동맹관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고, 케리 지원에 나선 웨슬리 클라크(Clarke) 前나토군사령관도 부시대통령의 미군재배치 계획은 ‘전략적인 실수’라고 비난했다.⁶³

美언론도 대체로 북한이 핵개발을 감행하는 등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며 핵개발을 해 온 북한에게 오히려 보상을 주는 결과가 됨을 지적하였다.⁶⁴ 특히 북한의 핵개발 중단 협상이 시급한 과제인 이 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숙원인 주한미군의 감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보다는 사실상 북한에 무조건 선사하는 처사를 택했고,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평가절하한다는 위협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⁶⁵ 한편 부시대통령의 미군 재배치 계획이

⁶² 존 케리 후보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부시행정부의 미군 감축 정책을 비판하였다.

⁶³ 존 케리 후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참전용사회 연설 내용 (2004. 8. 18).

⁶⁴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Aug 8, 2004. 사설 참조.

⁶⁵ 타임스 사설은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군이 가장 많이 철수하는 국가가 한국과 독일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전쟁에 관해 미국과 심각한 견해 차이를 나타낸 국가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New York Times*, Ibid.

“냉전종식 이후의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지리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지지를 보인 견해도 나타났다.⁶⁶

2004 美대선에서 한반도 핵문제가 주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한 것이 주목되거니와, 이렇듯 대선 이슈에서 타국의 안보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상례(常例)를 벗어나,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미국의 주요 정파와 언론 간에 美외교정책의 중요한 아젠다로 떠 오른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미군감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있게 견지되고 있다. 곧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안보공약의 다짐이다.⁶⁷ 미국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주둔 미군의 수적(數的) 감소에도 불구하고, 억지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우수한 경제력을 보유한’ 한국으로 하여금 보다 큰 자체방어 담당 의무를 지게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⁸

문제는 북핵 보유가 현실화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 현실을 우려하여,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과 독일의 경우, 현지의 반미감정 증대와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양국

⁶⁶ *Wall Street Journal*, Aug 17, 2004. 또한 『연합뉴스』, 2004년 8월 17일.

⁶⁷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美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야기시킬 수 있는 안보우려와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전쟁억지력이 약화된다는 시각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위의 글.

⁶⁸ 상기 청문회에서 럼즈펠드 장관의 언급: “한국전이 끝난 지 50년이 되고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북한의 25~30배가 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그간 한국 정부에 강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도록 책무를 이양해왔다”고 말함. 그는 특히 “한국은 앞으로 수년간 부가적인 책무들을 더욱 더 많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과 수년 사이 미국의 군사력은 엄청난 향상을 보였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군병력이 감소한다 해서 대북 억지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합뉴스』, 2004년 8월 18일.

정부와 美정부와의 차이를 미군감축의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 10월 한·미 양국이 미군 감축 연기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던 주한미군 전면철수 우려는 일단 가라앉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축 규모도 1만 2,500여 명 이상으로 증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보공백 우려를 과연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2008년 말 이후 한국이 자체적인 비무장지대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의 역학구조상 국가간의 공약이나 약속이 현실 정치의 변화 속에서 반드시 신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서 충분히 입증된 바가 있다. 아울러, 일련의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미국 내 여론동향을 고찰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상 민감한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놓고 한반도 정책과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미국의 고뇌와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다. 감축합의 내용

<주한미군 단계별 감축일정>

단계별	기 간	감축부대	감축인원
1단계	2004년 말까지	미2여단 전투단 (이라크에 기차출), 일부 전투부대, 군사임무 전환관련 부대	5,000여명 (이라크 기차출 3,600여명 포함)
2단계	2005~2006년 말까지	일부 전투부대, 군사 임무전환 관련부대, 기타 비원병력	2005년: 3,000명 2006년: 2,000명
3단계	2007~2008년 말까지	기타 지원부대 중심	2,500명

자료: 국방부 정책실장 발표, 2004.10.14

2004년 5월 미2사단 2여단 전투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1만 2,500명의 철수 결정이 내려진 이후, 4개월여 기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은 마침내 철수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3단계 감축에 관한 최종합의를 발표했다.⁶⁹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에 관한 한·미 양국 협정이 미국의 당초 계획인 2005년 말보다 3년 연기된 2008년까지의 단계적 감축으로 완전 합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2,500명이 철수함에 따라, 2008년 말 이후 현재의 3만 7,000명 선에서 2만 4,000~5,000명 선으로 감축되게 된다.

먼저, 1단계로 금년 철수하는 부대는 2004년 8월 이라크로 차출된 2여단 병력 3,600명과 후방 지역 화생방 제독 임무를 맡아 오다가 한국군에 임무를 이양한 화생방 방어부대로서, 도합 5,000명으로 추산된다.⁷⁰ 2단계와 3단계로 한국을 떠나는 병력은 일부 전투부대와 한국군에 대한 임무 이양 부대, 지원부대 등이 중심이 된다. 한편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다연장로켓(MLRS) 2개 대대와 대포병 레이더(ANTPQ) 등 대화력전 전력은 감축 계획에서 제외되었다.⁷¹ 특히 탱크 킬러로 불리는 아파치헬기

⁶⁹ 한국과 미국은 2004년 10월 6일, 2005년 말까지 1만 2,500명의 감축을 골자로 하는 미국측의 既감축안을 놓고 벌인 4개월여간의 협상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안광찬(安光贊)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⁷⁰ 2여단병력에는 2개 공중강습대대, 1개 기계화부대, M1 전차 140여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170여대가 포함되어있다.

⁷¹ 10개 특정 임무란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책임, 유사시 북한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유사시 북한 장거리포를 무력화하는 대(對)화력전 수행본부 임무, 지뢰살포, 화생방 제독, 헌병임무 등을 가리킨다. 이 중 북한의 위협적인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핵심전력공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다. 대화력전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수백문의 직경 170mm 자주포 및 240mm 방사포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www.bemil.pe.kr>, 『조선일보』, 2004년 6월 8일.

(AH-64) 3개 대대 중 헬기 보유 대수가 가장 적은 1개 대대만 철수하되, 잔류부대가 운용할 헬기는 롱보우(델타형)로 교체해 화력을 크게 보강하게 되었다.⁷² 이외,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 장비들은 주한미군 개편과 연계해 조정하되, 미육군 사전배치재고(APS: Army Prepositioned Stocks)에 포함,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⁷³

한·미 양국은 미군 병력 규모가 감축되더라도, 美육군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계획에 따른 미2사단 개편과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전력증강 계획에 의하여 실질적인 전투 능력은 보다 강화됨으로써, 연합 억제와 방위 태세는 더욱 굳건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⁷⁴ 110억 달러의 전력증강 대상은 정밀탄약 증강, 전투·전폭기 성능개선, 공수능력 증강, 최첨단 지휘통제장비 확보, C4ISR(지휘통제정찰) 최신화, 방공능력 증강 등 150개 이상 항목이 포함된다.⁷⁵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1만 2,500명의 최종 감축 시한을 오는 2008년으로 3년 늦춘 것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쟁 억제 역할이 매우 크며, 철수로 인한 전력 공백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국측 설득을 받

⁷² 남은 2개 대대는 모두 생존성 7배, 살상능력 4배 등 전투 효율성이 28배나 향상된 롱보우(델타형) 아파치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상전투를 지원하는 항공 능력이 증가된다. 롱보우 아파치 헬기는 12.7mm의 기관총에도 뚫리지 않는 방탄력과 적외선 탐지장비(RF), 전투기 공격이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16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유용원기자, 위의 글.

⁷³ 상기 국방부 정책실장 회견 내용 참조.

⁷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포착하는 대화력전 수행본부의 지휘·통제인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2005년 8월경 결정하기로 함. 북한군 특수부대의 해상침투를 저지하는 대특작부대와 주·야간 탐색구조부대, 근접 항공지원통제 요원들도 2006년 8월 한국군에 임무를 이양한 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⁷⁵ 『연합뉴스』, 2004년 10월 6일.

아들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4년 6월 감축 시기를 2005년말로 확정
한 이후,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왔고, 미래한
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등 공식·비공식 협상 채널에서 이러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시행
조치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한국측의 감축시기 연장 요청을 전
격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감축 시기 연장: 협상 전과 협상타결 후 비교>

	협상 전	협상타결 후
1만 2,500 병력 감축 문제	2005년말까지 감축	2008년말까지 단계적 감축
다연장 로켓포	1개 대대(18문) 감축	잔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 감축	1개 대대 감축, 나머지 2개 대대는 개량형 (AH-64D, 델타형)으로 대체
행정·지원부대	감축	감축 폭 확대

2.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주한미군 체제개편

미국이 한국측의 감축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자체의
‘군사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전략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GPR) 계획에 따라, 미국은 2005년 말까지 예정대로 주한미군의 전
면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군사변환 계획은 ①2사단 이하 1여단을 내년 초까지 기

존 여단보다 강력한 「행동부대(UA: Unit of Action)」로 개편하고, ②2사단 사령부는 내년 말까지 기존의 4배 규모인 「운용부대 X(UEx: Unit of Employment X)」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운용부대 Y(UEy: Unit of Employment Y)」도 신설되는바, 이는 규모가 큰 ‘미래형 군단급 사령부’로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는 해당되지 않고, 태평양 육군사령부에 신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UA(행동부대), UEx(운용부대 X), UEy(운용부대 Y)는 기존의 미군 여단·사단·군단·전구(戰區)급 군사령부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미군 편제(編制)개념으로서, 2014년경으로 예정된 미국의 차세대 전투체계(FCS: Future Combat System)에 대비한 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한미군 2사단은 유사시 3~4개 여단을 휘하에 거느리게 되어 있었음에 반해, UEx로 개편되면 평시에는 1개의 UA만 갖고 있지만 유사시에 최대 6개 이상의 UA가 한반도에 투입, UEx 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잔류할 미2사단은 종래 정찰기능을 갖춘 기갑사단과 통신, 포병, 화학, 정보, 기계화, 항공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군사변환 계획에 따라 화력, 통신, 정보, 공병, 무장 정찰부대로 구성된 미래형 사단(UEx)으로 개편된다. 특히 이라크로 차출되지 않고 한국에 남게 될 2사단의 핵심 전투부대인 1여단(현재 1,900여 명 병력)을 2005년 초까지 4,000여 명으로 증원하여, 첨단 네트워크전 개념을 도입한 기갑UA로 개편한다.

UA(행동부대)는 차기 전차와 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한 보병·기계화여단 및 스트라이커여단이 포함되어, 정찰기, 무인항공기(UAV), 정찰위성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육상, 해상, 공중에서 독자적

작전을 펼 수 있는 미래형 전투여단을 말한다.⁷⁶ 美육군은 2007년까지 기존 부대를 UA편제로 개편, 총 48개의 여단급 UA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상기와 같이 추진하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체제개편이 의도하는 한반도전략은 무엇인가?

첫째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지상군 규모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대규모 지상전은 불가피하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110만에 달하는 남북한 핵심전력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중공격과 대규모 집중방어가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기습공격시 사력을 다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적의 진공을 저지하고(hold), 미증원군의 증강을 등에 업고(reinforce), 반격(counterattack)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은 첨단전쟁 및 新작전개념을 명분으로, 유사시 자동연계될 수 있는 미지상군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⁷⁷

둘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증원 계획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상군 규모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략개념이다. 기존의 미군 증원계획은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무려 69만 명의 미군을 투입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美상비군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⁷⁶ 1개의 UA는 대대급 수준인 미래전투체계(FCS: Future Combat System) 6~8개로 구성된다. 미국은 무인전투장비 등 미래 첨단무기로 무장할 FCS를 2008년부터 실험하고, 2014~2018년에 본격적으로 UA를 만들 계획이다. 『중앙일보』, 2004년 8월 19일.

⁷⁷ 미국의 네트워크전, 효과기반 작전(EBO) 등 첨단전쟁 개념은 종전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럽스펠드 장관이 한반도 유사시의 전면전 계획 『5027』을 보고 ‘매우 낡은 계획’이라면서 화를 냈다는 내용 참조. 밥 우드워드가 쓴 ‘공격계획’이라는 책에서 인용. ‘유용원의 군사세계’, 『조선일보』에서 재인용됨.

계획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한·미 동맹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주한미지상군 및 미육군 편제개편>

주한미군	미육군 기존편제	변화 내용	신 편제
미8군	전구급 군사령부 군단	전구급군사령부와 군단을 통합, 미래형 군단급사령 부 신설	UEy(운용부대 Y) - 미래형 군단급 사령부
2사단	사단	⇒ 확대 (기존의 4배규모)	UEx(운용부대 X) - 화력·정보능력이 강화된 미래형사단 - 2005년말까지 사령부요원 300명을 1200명으로 확대
2사단 1여단	여단 (현재 1,900명)	⇒ 확대	UA(행동부대) - 2005년초, 첨단 네트워크전 개념 도입한 4천명 규모의 기갑 UA로 확대 - 미8군 예하로 이동
주둔지	미2사단은 전방, UN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사령 부는 용산	이전(移轉)	2008년말 이후 모두 한강 이남의 경기 평택

셋째는 한국자체의 방위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반미 감정과 반미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목도(目睹)하면서, 미국이 자체 비용을 들여 한국을 방위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 자주국방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미국측은 한국에 의한 방위부담 증대를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미 110억 달러 전력증강 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중이다. 편제 개편에 입각한 美육군의 군사적 변환 시도도 미국측의 전력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미국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 대한 방위부담 증대를 위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장비의 개량화·첨단화·기동화를 통한 지상군 비중의 축소와 함께, 전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최신 무기체계와 작전 및 군사력 운용개념에 따라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첨단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번 재편계획은 아파치 공격용 헬기 대대와 다연장 로켓·자주포 대대의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 지휘부는 강화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비해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미국측은 일부 핵심 전력부대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⁸

요약해 볼 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방위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미군의 희생이 예상되는 지상군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중방어, 원거리 방어무기, 스트라이커 기동부대, 그리고 탁월한 공군력 등 전반적인 군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간접지원을 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점이 과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동맹’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⁷⁸ “주한미군, 주일미군보다 높은 위상 유지”(2004. 8. 21)와 “주한미군 핵심전력 철수 연기 검토와 전면개편 추진 내용”(2004. 8. 16), 『조선일보』, ‘유용원의 군사 세계’ 참조.

3. 용산기지 이전

비무장지대 주둔 주한미군의 감축 및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 결정과 함께, 한·미 양국간의 오랜 협상 이슈였던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의 이전(移轉) 계획이 확정되었다. 사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이미 포함되었던 바 있다. 다만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금까지 약 10년간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아왔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2003년 2월 다시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한국측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2003년 2월 19일 럽스펠드 美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서울에 배치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한국 대통령에게 재조정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후 4월 9일 열린 미러한미동맹 1차회의 이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에서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 문제는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니었다. 한국은 미군이 서울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는 사실을 우려했고 미군의 일부 잔류를 원했기 때문이다. 미러한미동맹 3차 회의(2003년 7월 23일)에서 2006년까지 용산기지 이전이 합의되었으나, 유엔사와 연합사는 국방부 주변의 용산 부지에 잔류한다고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잔류기로 한 미군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81만 평 용산기지 중 28만 평을 요구했고 한국측은 17만 평밖에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측의 강경한 태도에 한국은 20만 평을 주고 높은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으나, 결국 2004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러한미

동맹 제6차 회의에서, 용산의 미군기지는 2007년 말까지 한강 이남으로 완전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돌이켜 볼 때, 한미연합사령부, UN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용산기지를 구태여 한강이남 곧 평택·오산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기지 부지 평수(坪數) 문제로 인해, 결국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이전(移轉)」으로 종결짓게 된 것이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측의 요구와 우리측의 제공가능 부지(敷地) 규모간 11만 평의 차이 때문에 결국 기지이전 협상이 결렬되어 이전(移轉)이 확정된 것이다. 평택·오산 지역으로의 이전에 있어서도, 미국은 360만 평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측은 330만 평을 제시하여 결국 30만 평의 부지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2004년 7월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미러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가까스로 349만 평으로 낙착됨으로써, 결렬위기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용산기지는 평택·오산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게 되었으며, 연합사, UN사, 주한미군사령부는 2007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균형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불과 몇십만 평의 부지 정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 불과 몇십만 평의 부지 때문에 수십조 원의 안보(安保) 보완비용이 지불되어야 하고, 아울러 주한미군 기지의 철수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과 고용(雇用)상의 마이너스 효과는 쉽게 추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제10차 미러한미동맹정책구상 합의를 통해 9개 기지로부터 5천1백여만 평을 반환받게 되었다고는 하나, 춘천, 원주 등 강원도 지역

의 미군기지가 대부분 유사시 중부·동부 전선에서의 항공 지원 및 對기갑 대응전력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기계화 병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전력을 우리 힘으로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 의한 反美감정 확산과 지역주민의 이기적 태도는 이런 점에서 자제되고 지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국정부는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이전과 관련, 오산 공군기지 주변 64만 평과 평택시 팽성읍 소재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일대 285만 평에 대한 부지 매입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당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말도록 요청한 데 대해, 정부는 거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용산 기지 이전비용 부담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정하는 총 이전 비용은 약 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⁷⁹

⁷⁹ 기획예산처가 2004년 10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연합뉴스』, 2004년 10월 20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안보

가. 북한의 국가목표와 대남정책목표

최근 북한의 변화 여부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국가 목표와 대남정책목표 곧 ‘대남전략의 변화’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왔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일종의 ‘병영국가’로서 북한의 국가목표는 군사정책 목표에 잘 반영되어 있고, 이들 정책들은 대남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북한의 한반도 적화정책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경제가 침체하고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북한의 이러한 국가목표 내지 대남정책 목표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곧 북한이 ‘체제생존 전략’이나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전략’ 등으로 대남전략 개념을 수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省察)은 이러한 북한 대남 전략에 대한 ‘변화’ 시각(視角)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軍) 또는 준(準)군조직 만큼은 특별관리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수백 만의 민간인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해도 개의치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독특한 군사·병영국가이다. 경제난, 식량난의 심화현상을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로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2004년 들어서서 북한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군(先軍)정치’이다. 선군정치란 군을 최우선시하며, 군을 앞세워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이다. 선군정치에 따라, 북한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이 군대로 투입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주민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는 명실공히 군과 국가는 동일시되며, 군대는 곧 김정일의 군대로 간주된다. 특이한 점은 혁명의 주체로서 더 이상 노동계급이 거론되지 않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는 이론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곧 군대를 혁명의 주요 요소로 삼는 선군혁명의 이론인 것이다.

과거에는 “군대를 한갓 정치의 수단으로 여겼지,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역량으로 보지 못했다”면서, 군대에게 새로운 혁명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노동계급 중심의 혁명 이론을 ‘교조주의적’인 것으로 배격하면서, “인민 군대는 사회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이며, 온 사회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주장함으로써, ‘선군후로(先軍後勞)’ 개념을 정당화하고 있다.⁸⁰

⁸⁰ 정영태, “김정일정권 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국내학술회의, 『김정일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2004. 4. 7).

나. 북한의 대남전술·태도 및 선전공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여부에 관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최근 대남 협상행태는 다음과 같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곧 대남전략의 기본 축은 불변이되, 대남전술 및 태도상의 다양한 변화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남태도 변화의 배경으로서는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를 이용하려는 전략적 동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3~2004년 북한지도부가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하는 주요 상황 변화는 ①‘화해·협력’에 대한 남한의 지속적인 열망과 그에 따른 대북 유화정책, ②한·미간의 이견노출과 한·미 동맹상의 균열조짐, ③남한 사회내 이념갈등의 확대와 반미감정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기존의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사이버 침투망을 이용하여, 대남 선전공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족공조’ 슬로건을 토대로, 평화, 반전, 반미, 통일이 그들의 주요 선전 구호들이다. 김정일정권은 남한 내 분열을 가속화시키며,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남한의 내부 붕괴를 기도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 사회 내 친북·좌경 세력이 점차적으로 전면에 대두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장하고 평화로 가장(假裝)하는 2중전략을 구사하면서, 그 정체를 판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는 가히 내정간섭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라크파병 비난과 파병 중단 및 철군 요구로부터⁸¹ 탈북민 468명 대

⁸¹ 북한의 대남사업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4년 8월 8일 남한

거 입국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본격 개입하여, 폐지 운동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은 한국정부가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의 ‘민족공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미 공조체제를 견지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국군의 해외파병과 실전(實戰)경험을 우려하는 동시에, 한·미 공조 강화 조치를 남북간 신뢰붕괴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남 비난 논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미 동맹을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미국의 요구를 앞자리에 놓는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남측에 이와 단호히 결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남한에 민족공조와 한·미 공조 중 선택하여,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04년 7월 ‘NLL사건’ 이후, 우리측은 「작전예규」를 수정하는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비무장지대 중동부 지역 체제선전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동년 8월 15일까지 철거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⁸²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4년 5월말과 6월초, 2차에 걸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선전방송 중단 및 선전수단의 제거’에 합의하였고, 우리측은 이를 합의대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 위협’이나 ‘실체적 위협’ 등의 완화된 표현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강하게 비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아직도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보는 반민족적이고 예측적

당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즉각적인 파병 중단 및 철군을 요구한 바 있음. 이후, 수시로 上記 내용을 남측에 요구해 오고 있음.

⁸² 북한軍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직후부터 휴전선 일대 확성기 방송에서 남한軍을 비방하는 용어는 중단하고 있음.

인,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⁸³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제고를 위해 북한에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의 타협적인 태도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⁸⁴

다. 북한의 군사동향

현재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 군사위협은 ①재래식 군사력, ②대량살상무기(핵, 생물·화학무기,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탄도미사일), ③특수부대, ④대남 전진배치로 인한 지역적 근접성(近接性) 등으로 압축되어 설명될 수 있다.

종래 북한이 남한의 우월한 경제, 한·미 동맹의 견고성, 이라크에서 보여준 미국의 첨단무기 위력 등을 두려워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한반도정세 변화가 그들의 군사전략을 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곧 한국사회 내부의 혼란 및 동요와 한·미 동맹의 약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2003년도 실제 북한군사비는 한국군사비의 40%에 달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⁸³ 북한의 『민주조선』, 2004년 7월 30일 논평 참조.

⁸⁴ *New York Times*, 인터넷판 보도, Sep. 6, 2004. 또한 “南정성에도 北양보 별로 없어,” 『연합뉴스』, 2004년 9월 6일.

(1) 재래식 군사력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약 117만에 달하는 정규군과 5백만을 넘는 예비군대로 구성되어, 규모만으로 볼 때 세계 제5위를 차지한다. 북한의 지상군은 8개의 보병군단, 4개의 기계화군단, 1기갑 군단, 그리고 2개 포병군단으로 구성된다. 해·공군은 9만 2,000명의 공군력과 1,700여 대의 항공기, 그리고 4만 6,000여 명의 해군력과 800여 척의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12만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세계최대 규모의 특수부대(SOF: Special Operations Force)이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고,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다. 이들의 규모는 최근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⁸⁵

특히 평양-원산을 잇는 선(線)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70% 이상이 집중배치되고 있어, 언제든지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전역이 북한군의 집중 포화에 노출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장사포 위협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GPR이 추구하는 바, ‘기동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확실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⁸⁶

주한미군 전력과 북한의 핵무기 및 생물·화학무기 등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으로 남북한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종합전쟁 수행능력이 북한군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는 주장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⁸⁷ 견고한 병커, 준비된 진지, 급조된 진지, 지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⁸⁸ 북측

⁸⁵ 홍관희, “탄핵 및 4·15총선을 전후한 북한동향과 한반도 안보정세,”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4. 12).

⁸⁶ 프랑스 일간 *Le Monde*지 보도, Aug. 18, 2004.

⁸⁷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수십 가지 평가요소를 토대로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결과 발표한 내용 참조 (2004. 8. 30).

은 남측에 비해 전차가 3,700대로서 1.54배, 야포는 1만문으로서 2배, 방사포(다연장포)는 22배 등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군의 통신장비와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능력이 북한군에 비해 우세한 점도 인정되나, 공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전력 확보를 위해 무인정찰기나 공중조기경보기를 구입하고 동굴파괴 미사일(병커버스터) 등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⁸⁹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무기나 고도의 정밀무기로도 파괴하기 어려운 수많은 견고한 지하병커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북한은 좁은 산악지대에 대규모 군사력이 밀집·배치되어있다.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지형적 특수성과 대규모 지상군의 밀집 배치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휴전선 북방 산악지대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격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 정리해 볼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공(可憐)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장기전 수행능력은 떨어지나, 단기 속전속결 능력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객관적 사실’인 것이다.⁹⁰

(2) 북한의 핵무기

북한이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

⁸⁸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력 평가방법을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비교분석에 적용한 결과, 남한군 군사력 지수가 북한군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KIDA 관계자가 밝힘. 위의 글.

⁸⁹ 앞서 KIDA 분석참조. 『연합뉴스』, 2004년 8월 30일.

⁹⁰ 피터 브룩스(Peter Brookes) 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 『미래한국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2004년 10월 8일.

의 실체를 고백·인정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이라크전쟁과 美대선의 혼란한 주변정세를 활용, 핵보유의 국제공인을 위한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핵선제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핵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유난히 ‘핵억지력 강화’를 언급하는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핵보유를 향한 그들의 야심과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협상용’이라는 주장은 점차 근거를 잃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많게는 8~9개, 적게는 3~4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⁹¹ 외신(外信)은 전반적으로 6자회담을 필두로 하는 대북 핵협상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⁹² 현재의 핵능력 등을 감안해 북한을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핵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⁹³ 또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2004년 10월 19일 발간된 「군사력 균형(Military

⁹¹ 열린우리당의 張永達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6~8개를 보유한 것으로 언급함(2004. 9. 30). 존 케리 美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한이 핵무기 4~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2004. 10. 1). 그는 또 당선되어 미·북 양자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함.

⁹²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부시행정부의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추거나 쇠퇴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함. *New York Times*, Aug. 8, 2004.

⁹³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Corey Gay Hinderstein 부소장,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 내용 참조(2004. 10. 14). 그는 북한이 최고 38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는 핵무기를 최고 9개까지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2~9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004년 10월 15일.

Balance) 2004-05』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의 추가적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분리한 것은 확실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의 선거 결과를 주시하면서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⁹⁴

북한 핵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있어 명백하게 실존하는 위협임에도, 그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무감각 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은 클린턴행정부 시절의 ‘미·북 양자 직접대화’ 구도가 북한핵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6자회담 구도를 통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북핵 저지 공동전선(前線)에 포함시켰으나,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포괄적 해법’이라는 최후에 가까운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앞서 언급한 바, 주변정세의 헛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북한의 외교공세에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곧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향한 그들의 진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9월말경 개최가 예상되던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남한의 핵물질 실험추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회담 개최를 무산시켰다. 북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 해소’와 핵(核)에 대한 ‘남북한 2중 잣대 철회’를 요구하고, “남한의 핵해명 없이, 남북관계 발전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해왔다.⁹⁵ 마침내, 북한은 2004년 9월 27일,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副相)이 ‘8천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무기화(weaponize)’를 공언함으로써, 한반도에 핵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⁹⁴ 『조선일보』, NK조선, 2004년 10월 20일.

⁹⁵ 북한 노동신문은 2004년 9월 20일 남한의 핵관련 실험을 문제삼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핵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부당한 2중 기준은 허용될 수 없다” 제하의 논평 참조.

대선(大選)기간 중 안보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상례(常例)를 무너뜨리고, 2004년 美대선에서는 이라크 문제와 맞물려 북한핵문제가 美외교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대선이 끝나는 2004년 말부터 2005년이 북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량살상무기로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⁹⁶ 2004년 9월 중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준비활동이 증가했다는 보도와 함께,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강화하고, 동해상에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 대북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북한의 생물·화학무기

북한은 현재 연간 4,500~5,000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전문가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으나,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⁷ 전시(戰時)에는 1만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 종류도 신경성과 수포성,

⁹⁶ 英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보도한 것으로 전해짐. 유용원기자, 『조선일보』 2004년 8월 4일.

⁹⁷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생·화학무기 개발을 시작, 연간 4,5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현재 2,500~4,000톤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 국정감사 정보위 보고 (2002. 10). 한편,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이 전시에 1만 2,000톤생산능력과 현재 5,000톤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함.

혈액성, 구토, 최루성, 독성 산업용 물질 등 종류가 다양하며, 장사정포(長射程砲) 미사일, 기타 폭탄 등 전달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⁹⁸ 현재 북한은 세계 최대 화학무기 보유국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수준을 보면, 생산량은 제한적이지만 독소와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생물무기 제재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초보적인 생물공학 시설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또한 탄저균, 보툴리눔, 콜레라, 천연두, 결핵균 등 15종류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러시아 등 국가들의 정보기관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⁹⁹ 이미 1990년대 초반 북한의 많은 의료기관과 대학에서 탄저균, 콜레라, 흑사병과 같은 병원균을 군사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생물공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북한은 생물무기 제재를 무기화하기 위한 생물탄 생산 기반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⁰ 북한은 이미 1980년 11월 김일성(金日成)의 지시에 따라 생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른 나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소를 세우고 생산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¹⁰¹

북한은 남한을 기습 공격할 때 생화학무기, 핵폭탄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해 초반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04년 대선 이후 신행정부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비

⁹⁸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국방연구원(KIDA)의 영문저널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에 기고한 연구보고서.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함 (2004. 10. 6).

⁹⁹ 지난 1993년 러시아 해외정보국(RFIS)이 이를 밝힌 바 있고,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이를 확인함.

¹⁰⁰ 조지 테넷 前 미중앙정보국장의 증언, 조지아대 국제무역안보센터의 스콧 조운스 선임연구원의 국방 전문주간 『디펜스 뉴스』에의 기고문 (2004. 10. 18).

¹⁰¹ 위의 글.

확산정책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화학무기 문제도 본격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노출된 핵무기 개발 이외에, 한·미 양국에게 새로운 잠재적 위협은 “생화학 전력(戰力)”임이 드러나고 있다.¹⁰²

2. 주한미군의 전략적·군사적 의의

주한미군을 분석·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외국군’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벗어나 한국의 국가이익 또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한반도의 군사안보 환경, 더 나아가 경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 문서상으로 보장된 북대서양조약(NATO) 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은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역사상 가장 막강한 동맹의 하나가 된 것은 바로 한국의 최전선과 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정부, 동두천의 미군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자동개입될 수밖에 없고, 서울주둔 미군은 전쟁발발 시 한국에 대한 강력한 미군의 증원을 보증하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은 그동안 사실상의 ‘인계철선(trip-wire)’이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지(deterrence)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50년 동안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억지해 왔던 미군의 배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¹⁰³

¹⁰² 베넷 박사 앞의 보고서, 『조선일보』, 2004년 10월 6일.

¹⁰³ 이춘근, “주한미군 4,000명 이라크 차출과 한국의 안보상황.”

주한미군이 갖는 전략적·군사적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의 지속적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한국경제가 IMF 터널을 빠져 나왔다고 하나 경제불안이 또다시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외국자본 유출 등 한국경제 안정에 크나큰 변수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 시 상응한 전력을 대치하기 위하여 막대한 추가적 국방예산이 소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긴요하다. 이 점은 한국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인 미·일·중 모두가 자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이 지역의 세력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특히 미군 철수 시 중·일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은 남북한 관계 진전과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통일 후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 상당기간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재검토 및 역할변경론은 한국군이 현대화되고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여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따른 군사적 균형이 성취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향후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병력의 후방 이동 등 군사적 위협을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잔여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고려해선 안 될 것이다.

2004년 한·미 양국간 합의로 2009년 이후 주한미군 규모는 2만 5,000여 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한국은 3년이란 시간을 벌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주한미군이 철수한 안보공백을 어떻게 보완하고 메워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3.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한국사회 내에 일어나고 있다. 먼저, 미군의 부분적 감축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있다. 그 근거로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에 비추어, 북한의 남한 공격이 불가피하게 미국의 개입을 가져올 것을 북한이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군감축 이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공군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중국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이 견해는 주장한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식량과 유류 등 가히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바, 북한이 중국의 원조를 희생하고 모험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¹⁰⁴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의 한국안보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좀 더 강한 주장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결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평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취약점은 30~45년 정도 오래된 구식 낡은 병기, 대단위 훈련

¹⁰⁴ 래리 닉쉬, “미군철수는 위험한가?,” 『조선일보』, 2004년 5월 25일.

을 불가능하게 하는 유류 부족, 방위산업의 붕괴, 전선(戰線)에서 조차 발생하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더 이상 비무장지대를 넘어 지속적인 남침을 전개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⁵

이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가 한국의 방위능력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 올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년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특히 미사일 공격, 특수전, 그리고 침투작전 등에서 한국을 방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비무장지대에서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핵심 방어전력을 한국군이 이양(移讓)받아 보완하여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적·재정적·기술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남한 경제가 최근 지속되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각 분야로부터 증대되는 재정지출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남한경제가 GNP상으로 북한의 30~40배에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대의 사기와 단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3년간 비무장지대로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그 안보공백을 메우는 일은 우리 안보·방위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주국방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0조원의 실질 전력투자비를 투자해야 한

¹⁰⁵ 위의 글.

다고 지적한다. 이는 향후 GDP대비 국방예산 비율을 매년 3.5%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현재 한국사회는 대한민국 국체(國體), 근·현대사, 그리고 세계관에 이르는 근본적인 견해에 대하여 전례 없는 상호대립·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방위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주한미군 부재(不在)시, 남한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공개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북한 남침 시 미군 도움 없으면 16일 만에 서울 함락’이라는 국방부의 남북한 전력(戰力) 비교 내용은 우리의 국가안보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¹⁰⁶

국방부 당국자는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가까스로 그 감축을 3년 연장한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가능성이 적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만의 하나’의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대비해야만 하는 국정의 第一義的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우리의 취약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모험을 감행할 동기(動機)를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는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북

¹⁰⁶ 국방연구원(KIDA)이 2003년 1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모의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이 2004년 10월 4일 국방부·합참 국정감사에서 공개함.

간의 군비감축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 안보정세는 6자회담이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속되고 있다.¹⁰⁷ 이 와중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대선 이후 새 지도부를 선출한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조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유대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길로 끌고 나갈 것”이라는 흥미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¹⁰⁸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차제에 남북간 군비감축을 논의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의 전기(轉機)로 삼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부른 군비감축 논의는 지극히 이상적(理想的)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¹⁰⁹

¹⁰⁷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식이 2004년 10월 20일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¹⁰⁸ “한·미 동맹 약화되면 한국은 북한과의 유대 강화할 것,” *Wall Street Journal*, June. 8, 2004.

¹⁰⁹ 한·미 양국간 북핵 해결 문제를 놓고 각각의 우선순위가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또는 방사능 물질이 테러리스트 및 기타 적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한국의 초점은 충돌을 피하고 화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同紙는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 6월, 김대중 前대통령과 북한 독재자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을 보다 덜 위협적으로 간주하게끔 이끌었다고 논평함.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방향

VI

1. 한·미 동맹 재정립 방향

가. 역사 속의 한·미관계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시행되고 한·미 동맹 관계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원천적(源泉的)인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 분단의 경우, 분단의 원인을 미·소 양국 공동으로 또는 더 나아가 미국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은 분단의 원인이, 미군의 남한 진주 때문이 아니라,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金日成) 세력의 등장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남하(南下)를 막기 위해 늦게나마 미군 파병을 결정하였고, 불가피하게 38도선을 획정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소련의 전(全)한반도 점령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는 맥아더 장군의 ‘일반명령 1호’였는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 주요 부분을 자유체제 속에 확보되게 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의 경우에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불의의 기습남침을 감행하였으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전국토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북한의 남침 직후 미국을 위시한 UN군의 즉각 참전은 자유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후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안보·군사 동맹 관계를 수립하고 견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나. 한반도 국제관계와 미국의 역할

국제사회, 특히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美國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일부에서 판단하듯, 이기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패권국가’가 아니라, 자유체제의 수호와 확산, 인권증진, 세계평화와 안정, 공공질서 유지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 ‘리더쉽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¹⁰

한반도에서 미국은 한국이 자유체제로 남아있는 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하고, 自由체제에 입각한 민족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국이 자유와 인권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는 국가라는 점과 한반도 주변 4국 중, 미국만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한국은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독재 등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汎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¹¹⁰ 필자의 拙稿, “이라크전쟁과 미국의 역할,”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2004. 4) 참조.

국제사회의 보편적 명분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諸문제—북한 핵·인권 문제 등—를 풀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선군정치’ 슬로건 하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재래식 군사력 강화에 열중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무력 도발 위협 하에서, 자주국방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은 한·미 동맹이 가져다주는 한국의 국가이익이 결코 산술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곧, 주한미군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이러한 근거에서 나오고 있다. 예컨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이웃으로 하여 살아 온 한국 역사를 고찰할 때, 이들 국가와의 관계 속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상호충돌하는 국가이익의 잠재적 모순을 극복해야만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미국은 이러한 모순관계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나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 「자주」와 한·미동맹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주’인가 ‘동맹’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논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사실이다. ‘자주’를 강조하는 견해는 그동안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불평등관계’에 입각한 대외의존적 관계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의 동맹관계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주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협력적 자주’ 등의 새로운 개념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군감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초의 정책적 대응은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¹¹¹ 이 개념은 방위능력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기를 희망하면서도,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집단안보’라는 관점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국정부의 고뇌와 딜레마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자주국방, 자주외교란 사실 지구상 모든 국가가 이상으로 삼는 외교·안보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자주외교’ 및 ‘자주국방’의 개념 자체가 모호할 만큼, 현대의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에서 국가간의 경제·안보 현안이 밀접하게 얽혀있어서, ‘자주’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큰 의미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며 협력안보의 시대이고, 특히 테러전쟁의 시대는 국제적 안보협력이 절실한 시대이다. 예컨대, 세계10대 무역국으로서 중동아시아의 석유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은 해상수송로(海路)의 안보를 거의 100% 완벽하게 다른 나라의 군사력(군

¹¹¹ 김희상, “기조연설,”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통일연구원, 국방대학교 공동주최 안보학술세미나 (2004. 5. 11) 참조.

미국 해군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재(公共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공재의 ‘무임승차자(free-rider)’인 셈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자주국방’은 고아(高雅)하고 영광된 슬로건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의 평균 국방비 지출(GDP의 3.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2004년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9%에 불과하였다. 주한미군 감축 이후 한국의 방위예산은 대폭 증대될 것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국방비는 118억 달러이지만, 주한미군이 같은 해에 지출한 방위비는 10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¹¹² 자주국방의 경제적 한계, 곧 현실적 어려움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들이다.

아울러,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의 주장과 대외표방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커다란 손실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테러전쟁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조차도 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한국이 주요한 적국(敵國)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나라를 잠재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더욱 좋은 상황이다. 문제는 ‘자주’를 주장함으로써, 만의 하나 반미(反美)를 상징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전략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주의 전략적 불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의 전격적인 결정과 한·미관계의 동요는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근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차가 발생하면서 비롯된

¹¹² 이춘근, “주한미군 4,000명 이라크 차출과 한국의 안보상황.”

것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對美인식과 행동이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의도했던 아니했던 간에, 반미감정 및 운동은 한국과 군사적 대치 및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반미-반전-평화-통일 주장 및 정치선전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反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인권증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한·미 공조'만이 역사 발전의 길에서 일탈(逸脫)하지 않는 확실한 선택임을 확인하게 된다.

2. 안보정책 대응방안

가. 국가안보태세의 확립: 방위전략 재점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적화의 대남전략 구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면, 초전(初戰) 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계화 및 자주화된 기동부대로 속전속결을 기도하는 한편, 특수부대를 활용, 정규전 및 非정규전의 배합으로 동시 전장화(戰場化)하여 美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남한 전역을 석권한다는 소위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대남 군사전략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속전속결전략에 의해 남한전역의 석권이 여의치 않을 때, 북한은 서울 또는 수도권 일부, 특히 한강 이북

을 먼저 점령한 후, 점령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강화(講和) 및 휴전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전략은 주한미군의 자동 인계철선 개념 및 미국의 추가 지원 확약 담보, 그리고 기습공격을 당하였을 경우 대량보복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시키는 정책이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이 기습 공격해 올 경우, 지금까지 한국의 방위전략은 먼저 전방에서 이를 저지하고(hold), 미군이 대규모 증원(reinforce)을 한 뒤에, 북한군에 대한 반격(counterattack)을 개시하여, 북한군을 완전히 격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¹¹³ 한국군은 ‘線 방어개념(linear defense)’에 의해 전방에 대규모의 지상군을 배치함으로써, 북한군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경보 능력을 동원하여 북한군의 기습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북한군의 ‘집중공격’에 대해 대규모 ‘집중방어’로 대응함으로써, 북한군의 수적(數的) 우세를 불허하고, 최전선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다.¹¹⁴

요컨대, 한국의 국방정책의 기초는 전쟁억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북 도발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방전략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은 그동안 한·미 연합군의 방어 전력에 놓여 있는바,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 이남으로 감축 및 재배치되는 상황에서 향후 수년 내에 미군의 ‘자동인계철선(trip-wire)’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고, 유사시 추가 증원군 약속은 국제정치 역학상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 문제

¹¹³ 한용섭, “자주국방과 지상군 발전방향,” 육군, 서울대 공동 개최 GOP안보토론회 발표 논문 (2004. 6. 23).

¹¹⁴ 위의 글.

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향후 수년간 한·미 연합방위에 의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한국 방위를 달성해 왔던 기존의 방위체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애당초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3~5년에 걸쳐 실시될 중장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이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감축·재배치된 이후의 방위전략을 재점검하여 국가안보태세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담당했던 핵심 방어 전력—곧, 한국군에게 이양할 계획으로 있는 10개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과 한국군이 북한군의 도발 방어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력 등—을 하루 빨리 자체적으로 보완·보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북한 장사정포(長射程砲: 54km 사정거리의 170mm 자주포, 60km 사정거리의 240mm 방사포 등)의 위협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對포병작전은 30여문의 다연장로켓포(MLRS)와 30여문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를 보유한 미2사단 예하 포병여단이 담당해왔다. 이 외에, 북한 핵탄두 및 재래식 미사일 공격과 화학탄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잠수함에 의한 공격, 서해함대에 배치된 고속상륙함정의 특수작전능력에 대한 대응능력 및 북한의 해상 침투저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저지를 위한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항공전력 분야에서는 비정규전용 전투기를 이용한 대규모 은밀침투에 대한 대비능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 전투기의 35%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되어 기습공격에 대한 방위가 취약

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과제에 부분적으로 대처하는데도 10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¹⁵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 장사정보를 무력화하는 대화력전 수행본부의 임무를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옮기기로 한 · 미간에 합의됨에 따라, 최근 독자적인 대화력전 체계구축을 당초 예정보다 수년 단축하여 조기에 구축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⁶ 구체적으로 이는 KJCCS(Korean Joint Command Control System)의 조기 도입 · 구축을 의미한다. KJCCS는 1999년 국내 기술로 개발돼 각급 제대별로 운용 중인 C4I 체계인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능력을 대폭 개량한 것으로 각군에서 북한군 정보를 동시에 입수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formation) 등 5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해 포병부대 등 각급부대 지휘관들이 실시간으로 작전대응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 것이다.¹¹⁷

이외에, 한국은 중 · 일 · 러 등 주변 강대국과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군사첩보위성 하나 없이 주변 군사정보의 9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군의 정보부대가 철수할 때,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안보공약이 사회 각 방면에 끼친 각종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강력히 지원하는 힘이였다. 1988 올림픽 유치도

¹¹⁵ ‘솔저스 스토리,’ 『조선일보』, 2004년 10월 4일.

¹¹⁶ 『연합뉴스』, 2004년 6월 10일.

¹¹⁷ 軍의 ‘눈’에 해당되는 신호 · 영상 정보수집체계와 무인 항공기(UAV), 대포병 표적탐지 레이더 AN/TPQ, 열상관측장비(TOD) 등으로 북한군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KJCCS를 통해 포병부대 등에서 곧바로 감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후원, 주한미군의 안보공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¹¹⁸

특히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 분야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조치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주는 가장 심각한 영향이 될 수 있다.

나. 방위예산의 확보

(1)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와 한국경제

주한미군 감축과 후방배치 그리고 용산 기지의 평택지역으로의 이전은 국가안보 이외에 한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방위비 절약 효과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연간 14조~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정부는 매년 2조4000억 원씩 10년간 24조원을 전력대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GDP는 연 1.20~1.69% 정도 감소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¹¹⁹ 빠르게 추진되는 미군 감축의 전력 공백에 대처, 조기 투자를 확보하는 ‘단기 압축 전력건설 전략’을 추구할 때, 향후 5년간 25조 국방비 필요(매년 5조씩)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¹²⁰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4% 안팎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제

¹¹⁸ 외무부 미주국장을 역임한 신두병 전 이탈리아 대사 언급. “급변하는 한·미동맹: 요동치는 동북아(1)—앞게 될 ‘美國프리미엄’: ‘든든한 후원자’ 잃고 홀로 서야 할 한국,” 『조선일보』 2004년 6월 12일. A8[종합].

¹¹⁹ 최병일, “감상적 민족주의, 경제적 대가 치른다,” 『조선일보』, 2004년 6월 11일.

¹²⁰ ‘솔저스 스토리,’ 『조선일보』, 2004년 10월 4일.

성장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량 실업사태를 장기화하고, 사회 불안을 예고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 시설 건설비용은 약 40억 달러(4.5~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전액 우리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2사단이 전방에서 후방으로 배치될 때, 2사단이 맡고 있던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보나 야포를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한국군이 인수해야 한다면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290억 달러로서 약 3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¹²¹

또 만약 한·미 관계가 갈수록 악화돼 안보리스크가 증대하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더 낮아지고 외국의 투자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¹²² 국제기관에 의한 한국의 신용등급도 북핵사태 등 안보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A3)이 아직도 중국·헝가리·체코(A2)보다 낮은 것도 북핵문제가 결정적 요인이다. 1993년 북핵 위기가 증권시장에 미친 충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1%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²³

(2) 2005년도 국방예산 분석

국방부가 요청한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 규모는 GDP의 2.9%인 21조4752억 원으로서 2004년 18조9412억 원보다 13.4%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비무장지대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자주국방 능력

¹²¹ 송문홍의 논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songmh@donga.com>>, 한용섭, “자주국방과 지상군 발전방향”에서 재인용.

¹²² 외교안보연구원, “한·미동맹 분석자료” (2004. 3).

¹²³ 최병일, “감상적 민족주의, 경제적 대가 치른다.”

을 확보하는 데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킬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아마도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첨가되면, GDP 대비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중 전력투자비와 경상유지비는 각각 16.0%, 12.1% 증액된 7조3003억 원과 14조1749억 원이다.

2005년 예산안의 특징은 총 국방예산에서 전력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33.2%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0%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정보수집용 군위성통신장비와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 등을 처음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영속사업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전술 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등 22개 사업에 4천83억 원, 기동·타격 전력에 8천488억 원, 해상·상륙 전력에 1조2천763억 원, 공중·방공전력에 1조5천973억 원, 핵심무기체계 개발 등에 7천751억 원이 각각 할당됐다.¹²⁴

(3) 방위예산 확충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이후 방위능력 확충을 위해선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미군이 빠져나간 비무장지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국군 전력 투자비는 거의 증가되지 않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 국방비 수준으로는 기존전력 유지도 힘들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이다.¹²⁵

현재 국방비 소요 내역상 경상비 부족이 현저하며, 따라서 경상비 절

¹²⁴ “유용원의 군사세계,” 『조선일보』, 2004년 6월 12일.

¹²⁵ 홍관희, “안보위기, 어떻게 대처하나?,” 『조선일보』, 2004년 6월 8일.

약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용 탄약과 유류가 부족하여 군사훈련에 제한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¹²⁶ 그동안 ‘자주국방론’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었으나, 2004년도 국방비는 전년 대비 0.1% 증액된 GDP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분단·대치국 평균(GDP 6.3%)과 세계 평균(GDP 3.5%)에 훨씬 미달하는 수치이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세계 29위로 미국의 4분의 1, 영국의 2분의 1 수준이며, 장병 1인당 군사비는 세계 62위로 일본의 8분의 1에도 미달한다.¹²⁷

전반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이후 우리의 방위예산은 최소한 GDP 대비 3.2%선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북핵 저지노력이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의 북핵 대비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자세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전술적 핵억지 능력에 의존해왔으므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부분철수가 가시화되면,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 주둔을 허용하든가 또는 핵문제에 관한 긴밀한 한·미 공조 등을 통해, 북핵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및 생물·화학무기

¹²⁶ 국회 국방위원회 박진(朴振.) 의원,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 한·미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 탄약 총보유량이 군사작전상 목표(60일 기준)의 59%에 불과하며 미군이 보유한 탄약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비축량은 10일치(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2004. 10. 11).

¹²⁷ 홍관희, “安保위기, 어떻게 대처하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戰略)물자의 대북 반출에 크게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장치는 오래전부터 서방선진국(美, 西유럽 등)들의 대공산권 교역 곧 적성국(敵性國)과의 교역에 있어, 이들 국가의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중대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그 반출과 이전(移轉)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export control) 마련한 규제와 법안을 의미한다. 그 취지는 직접적인 군사물자 뿐만 아니라, 민수(民需)·군수(軍需) 이중사용이 가능한 기술(dual-use technology) 및 전략물자의 對적성국 반출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세계평화 위협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대표적인 것은 1995년 12월 합의된 「바세나르 협정」이다. 바세나르체제는 이들 국가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기술, 장비 이전을 통제하는 UN중심의 수출통제체제이다.

한국도 이 협정에 가입해 있으므로, 우리와 군사대치 관계에 있는 북한에 물자를 반출할 때는 바세나르의 법적 장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및 동법(同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등과 같은 법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조치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개성공단 등 대북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물자들이 과연 이중용도가 가능한 전략물자인지 논란이 일고 있고, 바세나르 협정 위반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펜티엄급 컴퓨터’의 대북지원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은 개성공단으로 반출될 600개 이상의 물품에 대해, 이들이 군사목적에 쓰일 수 있

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국에 심사 의뢰 중이다. 완제품으로는 제어용 컴퓨터, 선반 등이 정밀 심사 대상이다. 미국정부는 “민감한 물자와 공작기계류 등의 대북반출 가능성과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돼 있는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우려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경우에 따라 한·미 관계의 균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¹²⁹

최근 대량살상무기 중 맹독성 화학무기인 ‘사린 가스’의 주원료 ‘시안화나트륨’이 태국을 거쳐 북한에 수출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 가려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감시체계에 적발되어 회수되었고, 미국에 의해 한국에 통보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PSI가 세계 주요 국가들 다수의 지원을 받아 현재 가동 중이다. 주로 해상(물론 공중, 육상의 경우도 대상이 되지만)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문·검색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각국의 해군력이 직접 동원되는 군사적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나라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¹³⁰

PSI는 물론 북한의 핵개발 그 자체를 직접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명칭 그대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량

¹²⁸ CRS(美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동아시아 분석가인 마크 매넨 박사의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초청 강연 참조 (미국 뉴저지주, 2004년 10월 27일).

¹²⁹ 『연합뉴스』, 2004년 10월 28일.

¹³⁰ 이춘근,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7. 21).

살상무기의 확산 방지가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는 간접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PSI의 효용성이 있다.¹³¹ PSI 조치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미사일 수출대금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¹³² 2004년 10월 25일부터 일본 주최로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8개국을 주축으로 영국, 러시아 등 18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 가운데 도쿄만에서 PSI 훈련이 실시된 바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점차 가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도 PSI참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¹³¹ 위의 글.

¹³² 존 볼튼 미국무부 군비관리·국제안보담당차관의 언명, 『산케이신문』, 2004년 10월 27일.

결론

VII

2004년 5~6월, 미국의 전격적인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의 결정이 미국 자체의 GPR에 의한 것이긴, 한국 내 반미감정 확산과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 노선 차이에 따른 것이긴,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른 안보공백을 보완하고,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군사적, 재정적, 기술적,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감군(減軍) 조치에 직면하여,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보보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한·미 협상에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2005년 말까지 계획되었던 1만 2,500명 병력 감축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시기 연장 조치가 미국의 감군 조치로 인한 한국 국가안보상의 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먼저, 감군 조치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감군 조치와 미군 자체의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조치에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 전략변화는 대략 ①한반도 주둔 미지상군 규모의 감축, ②지상군 주둔 보다는 증

원(增援)계획을 통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책 강구, ③한국자체의 방위비 부담 독려, ④장비의 개량화·첨단화·기동화를 통한 전투능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준수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북한의 표면적 협상행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락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전략은 위장되고 은폐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남 선전·선동 공세로 인해 그 위협의 도(度)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생물·화학무기는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사일 능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국가안보 상황에서 맞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조치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국은 자유와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대외정책 기조로 삼고 있고, 한반도에 사활적(死活的)이라 할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의 諸문제 곧 남북간 핵·인권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패권적 간섭과 개입 문제 등의 국제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미군의 비무장지대 주둔으로 인한 ‘자동 인계철선’ 개념이 미군 감축 및 재배치로 소멸되고, 한국자체의 방위 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속전속결전략, 특수부대 침투를 이

용한 정규·비정규전 배합전략, 비무장지대 북방에 포진된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한 기존의 방위전략을 재점검하고, 방위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하여, 북한군의 기습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차단함으로써, 북한군의 대규모 집중공격에 대한 집중방어 전략과 함께, 북한군의 기습에 의한 비무장지대 돌파 전략을 저지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가 등 경제적 뒷받침이 불가결할 것이다. 동시에,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 북한핵무기 보유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美대선이 완료되고 미국에 新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 물자의 반출에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장차 PSI에의 참가를 통해 미국을 위시한 자유서방국가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섬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서울: 국방부, 2002. 4.
- 미국 국방대학원. 『FY2002 미국방 연례보고서』, 2001.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과 정서: 미국 및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견해(Strategic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2004. 6. 8.
-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과 국제사회의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4-01, 2004. 10.
- 통일연구원 · 국방대학교.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2004. 5. 11.

2. 논 문

- 김성한.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GPR)과 한·미동맹.”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2003. 10. 17.
- 오진룡. “9·11이후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개괄.”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3. 12. 19.
- 이춘근. “주한미군 4,000명 이라크 차출과 한국의 안보상황.” 『조선일보』 “유용원의 군사세계,” 2004. 5. 19. <<http://brd3.chosun.com/bemil/view.html>.>
- _____.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7. 21.
- 정영태. “김정일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국내학술회의. 『김정일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2004. 4. 7.
- 최병일. “감상적 민족주의, 경제적 대가 치른다.” 『조선일보』, 2004년 6월 11일.
- 한용섭. “자주국방과 지상군 발전방향.” 육군과 서울대가 서부전선 최전방 도

- 라전망대에서 개최한 GOP안보토론회 발표 논문, 2004. 6. 23.
- 홍관희. “주한미군 감축과 안보불안: 분석과 대책.”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8. 2.
- _____. “국가안보 측면에서 본 수도이전 정책 평가.” 한국정치학회, 2004. 10. 15.
- _____. “탄핵 및 4·15총선을 전후한 북한동향과 한반도 안보정세.”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4. 12.
- _____. “이라크전쟁과 미국의 역할.”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4.
- _____. “안보위기, 어떻게 대처하나?.” 『조선일보』(시론), 2004년 6월 8일.
- Richard Halloran. “South Korea not a reliable ally?.” *The Korea Herald*, June 11, 2004.
- Larry Niksch. “미군철수는 위험한가?.” 『조선일보』, 2004년 5월 25일.

3. 기타

- 외교안보연구원. “한·미동맹 분석자료,” 2004. 3.
- 미국정부. 『2004 북한인권법안(2004 Human Rights Act of North Korea)』
『동아일보』
『미래한국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CNN
Janes Defense Weekly
Le Monde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AFP 통신

『AP연합』

『新聞週刊』

『讀賣新聞』

『産經新聞』

유용원의 군사세계(www.bemil.pe.kr)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KIDA)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중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헌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정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노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